

선진국 지자체 주민의견 수렴 어떻게하나

우편·이메일 정보 공개
공청회는 평일 저녁에

최근 모든 정책 및 사업 결정에 서 주민참여는 필수조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민참여로 사업이나 정책의 질을 높이는 한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민원 감소, 그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방지 등의 긍정적인 효과 때문이다.

그러나 광주·전남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공청회나 설명회, 공담 등을 실시하는 데 있어 평일 오전 오후 또는 휴가철 등으로 시간을 정하고, 장소도 한정시켜 주민참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민 스스로 적극적으로 지역 현안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주민 의견 수렴 방법을 참고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에 주민들의 무게가 실린다. <의견 없는 주민의견수렴=주

◇선진국 사례=선진국에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등 주요 도시에서는 대규모 사업 및 정책을 시행하면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 정보에 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시 담당자에게 이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고, 다시 그 담당자는 이를 모두 정리해 반영 여부를 알려주고 있다. 미국 인디애나주 블루밍턴시에서는 각종 공청회나 설명회의 시간대를 아예 평일 오후 7시 이후에 개최하고 있다. 일본 역시 도시계획 등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전제로 계획 이전 단계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김재석 광주 경실련 사무처장은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참여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 그 기간을 늘리는 한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의견 개선도 필요=제도의 개선뿐 아니라 시민들이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스스로 참여하는 자세도 요구되고 있다. 이들 사업이나 정책에 ‘무관심’했다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결부될 경우 뒤늦게 반발하고, 집단적으로 항의하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해야 행정기관에서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며 “주민 상당수가 자신의 생계에 바쁘고, 공공의 문제는 자신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 십년째 같은 방법의 공청회, 설명회 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개개인 의견 반영 여부 반드시 알려주고
자발적 주민참여 이끌어 민원 소지 불식

민의견 수렴 방법으로는 공청회와 설명회, 공담 등이 있다. 공청회와 설명회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참석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담은 개별이나 정책과 관련된 서류를 특정 장소에 두고, 이해당사자나 주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시된 주민의견은 각 지자체에 설치된 위원회나 행정관청 등에서 해당 사업이나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상당수 안전에서 주민의견 청취 결과는 제시된 의견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개최된 광주시 2010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안으로 제출된 ‘광주 도시관리 계획 결정(안)’ 등 2건 모두 15일간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나 주민의견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김준규 검찰총장 21일 오전 대검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끝 안보이는
檢-法 갈등

선고 앞둔 시국사건 줄줄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 판결을 계기로 검찰과 법원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앞으로 민감한 시국사건의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이들 사건에 대한 판결이 법원이나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것은 물론 무죄 선고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검찰과 법원의 갈등구도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1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앞서 정치·사회적으로 민감성을 띠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들의 시국선언, 철도노조 파업, 야간육외집회 금지조항 위반 사건 등에 대한 판결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게 된다.

야간육외집회 금지조항 위반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헌법불합치’로 판정하면서 오는 6월30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계속 적용도록 했지만 법원에서 판사별로 유·무죄 판결이 계속 엇갈렸다.

2008년 촛불집회 사건에서는 전국적으로 93만명의 참가자 가운데 1천258명이 기소된 뒤 대구지법·울산지법·북부지법 등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선 재판부에 따라 유·무죄 판결이 달랐다.

전교조 시국선언 참가자에 대해선 전주지법에서 19일 전교조 전북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첫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지난해 6월18일 이뤄진 전교조 ‘1차 시국선언’과 관련해 정진후 위원장 등 86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하고,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소속 간부 73명을 추가로 기소했으며 앞으로 지방법원별로 선고가 줄을 잇게 된다. 지난해 철도노조가 해고자 복직, 노조 상대 소송 및 징계 철회 등을 주장하면서 준비투쟁, 파업을 벌인 것과 관련, 검찰은 전국에서 철도노조 주요 간부 6명을 기소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된 ‘공우병 보도’의 경우 형사재판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며 민사 정보보호 소송도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법원은 개별 사안마다 사실관계나 사건의 특성이 다르다고 보고 독립된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검찰은 ‘체제로 비슷한 맥락의 사건이기 때문에 결과도 크게 다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심에서 유·무죄 판결이 엇갈릴 경우 검찰은 적극 항소하면서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검찰과 법원의 갈등도 갈수록 악화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법원의 특정 판결을 보면 법관의 성향이나 주관적 판단이 지나치게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경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만 법원은 그럴 수 없다”며 “개별 재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항소, 상고 절차를 통해 시정을 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용훈 대법원장이 21일 오전 대법원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김준규총장 “검사여 단결하라” 사상 첫 전국 검사회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PD수첩 제작진 등에 대한 잇따른 무죄판결로 법원-검찰 간 갈등의 끝이 더욱 깊어지는 가운데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들의 ‘일치단결’을 주문했다.

21일 오전 10시부터 사상 처음으로 열린 전국 검사회의의 석상에서, 1시간 정도 이어진 검사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됐으며 검찰 수뇌부와 전국 1천700여명의 검사가 동시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최근 일련의 판결과 처분을 둘러싼 법원과의 갈등상황과 관련, “이번 화상회의를 통해 전국 검사가 하나가 됐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주변 국면이 어수선하지만 우리 검찰은 의연하고 당당하게 나갔으면 한다”며 “검찰에게 주어진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꾸준히 하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법원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자칫 동요할 가능성이 있는 일선 검사들을 추스리기 위한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지금의 갈등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즉흥적인 대응보다는 검찰조직 차원에서 보다 진중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검사회의는 초반 10분간을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최근 법원과의 갈등사태에 대해 공식 대응을 자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현안’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이나 발언은 없었다고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전했다. 검사회의의 공식 안건은 김 총장이 신년사를 통해 올해 화두로 제시했던 ‘변도의 실천’과 ‘범죄 대응’ 등이었다.

하지만 김 총장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검찰은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많은 조직이라는 자긍심을 가지자. 반듯하게 바르게 가면 누가 비난하겠나”라며 수년간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온 일선 검사들의 마음을 달랠었다. 그는 또 “지난주 이번주 복잡하지만 바르게 반듯하게 가자”며 조직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발언도 빠뜨리지 않았다. <연합뉴스

대법원장 차량 계란 투척 수사 착수

일부 보수단체들이 21일 이용훈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계란을 투척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한민국어비이연합과 자유개혁청년당 등 4대 보수단체 관계자 50여 명은 이날 오전 7시께 용산구 대법원장 공관 근처에서 ‘PD수첩 무죄 판결’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이중 일부는 인근 도로에서 이 대법원장의 관용차에 계란을 던졌다.

경찰은 현재 현장 사진 등의 증거를 수집해 누구를 불러 조사할지를 검토하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검찰 ‘PD수첩 무죄 판결’ 불복 항소

서울중앙지검은 미국산 쇠고기의 공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내려진 무죄 판결에 불복,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은 항소장만 냈고 항소이유서는 작성되는 대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판사는 명예훼손과 업무상 방해 혐의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미래를 위한 선택, 꿈을 향한 도전! 변화의 시대에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책! 김장환 전 교육감이 전하는 교육 희망 보고서 실력 전남교육을 향한 선택과 도전

이 단행본은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미래의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록과 회고를 넘어서, 수많은 자료와 연구를 통해 쓴 전남교육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교육의 희망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www.kimjangwan.com>

미래에는 단언컨대가 있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의 시간과 노력을 바탕으로 후대가 선택하고 도전하는 만큼 미래는 현실로 다가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곧 우리 전남교육이 희망입니다. <www.kimjangwan.com>